

국제사회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동향 연구

OECD와 EU의 중점 적용 분야 분석을 중심으로*

문 경 연**·손 혁 상***

◆ 요약 ◆

본 논문은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Peer Review)의 주요 의제인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및 비원조분야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논의를 적용 분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PCD 논의를 주창하고 있는 OECD와 EU 그리고 주요 공여국이 집중하고 있는 PCD 정책 분야를 검토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PCD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PCD 논의는 무역, 기후변화, 불법자금흐름(조세·투자·송금 포함), 식량안보, 이민 및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

다. 아울러 PCD의 중요성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그간 PCD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PCD 사례로 해석되는 국내 정책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못한 바 있으나, 향후 PCD적 관점에서 포함될 수 있는 기존의 우수 국내사례를 발굴하고 축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PCD 논의에 동참하는 노력과 함께, OECD와 EU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 분야들에서 PCD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핵심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3호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224). 본 논문은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일관성 연구』(국무조정실, 2016)를 바탕으로 논문화한 것임을 밝힘.

** 제1저자, 전북대학교 지미카터국제학부 교수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I. 서론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원조 분야뿐만 아니라 비원조 분야에서도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 개념을 도입하고 개별 공여국들로 하여금 PCD의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PCD 규범이 개별 공여국의 원조 및 비원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OECD DAC은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Peer Review(이하 ‘동료검토’) 보고서의 두 번째 챕터인 ‘Development Beyond Aid’에서 해당 국가의 PCD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17개의 범분야 이슈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채택과 함께 원조 및 비원조 분야 그리고 다양한 행위 주체 간 정책적 일관성 제고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OECD DAC은 범 분야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SDGs의 채택과 함께 이들 범 분야에 걸쳐 정책적 일관성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PCD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PCSD’)'으로 개정하여 그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PCD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은 2010년 DAC의 회원국이 된 이래로 2012년에 첫 동료검토를 수검하였는데 이에 앞서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PCD 개념의 이해 및 국내 추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발주하였고, 그 연구결과가 동료검토 바로 직전인 2012년 5월 발간되면서 국내에서 PCD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손혁상 외 2012). 특히 이 보고서는 PCD 개념의 정의 및 작동방식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한국 내 PCD 수준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례분석 파트에서는 무역과 이민정책 분야에서 PCD적 접근법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2012년의 첫 동료검토는 PCD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관 하에 범정부적인 의제를 수립하는 한편, PCD 제고와 조율을 위한 충분한 기술 및 정치적

역량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PCD적 관점에서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보고를 활용 할 것을 명시하였다(OECD 2012b).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첫 동료검토를 수검한 이래로 5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PCD 개념과 그 접근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PCD 관련 연구는 미약하였다. 먼저, 2010년 박성훈(2010)의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EU의 역할과 의미: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가 동 주제에 대한 연구의 시초이다. 특히, 한국에서 PCD 논의가 2012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박성훈의 연구는 선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박성훈의 연구가 EU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PCD가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으나, PCD가 논문 자체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국제개발정책에 있어서 EU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PCD 역사적 발전이나, 이론적 프레임워크 등을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후 손혁상·문경연(2012)은 스웨덴과 독일 사례연구를 통해 PCD가 내재화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유기적인 의원내각제 정치시스템이 PCD 확산에 우호적임을 분석하였고, 손혁상·박영선(2012)은 한국의 국내 정치 내에서 PCD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PCD의 적용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손혁상·김소위 외(2012)가 무역 분야의 PCD 주요 내용과 한국의 무역 분야 PCD 현황을 분석하였고, 김형규(2015)의 연구는 이민정책 분야에서 PCD 논의 내용과 국내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가 전부이다. 정책 보고서에서의 PCD 연구는 손혁상·박영선·문경연(2012)의 연구가 PCD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PCD적 관점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수 있는 국내 사례 발굴과, 한국의 PCD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후 조영희·신지원(2013)의 연구에서는 PCD 적용 분야로서 이민분야에서의 PCD 관련 정책과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PCD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PCD 연구 및 정책화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발협력 목표의 실현에 있어 정책 간 일관성 제고가 중요한 어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PCD 논의에 대한 동참(국제사회가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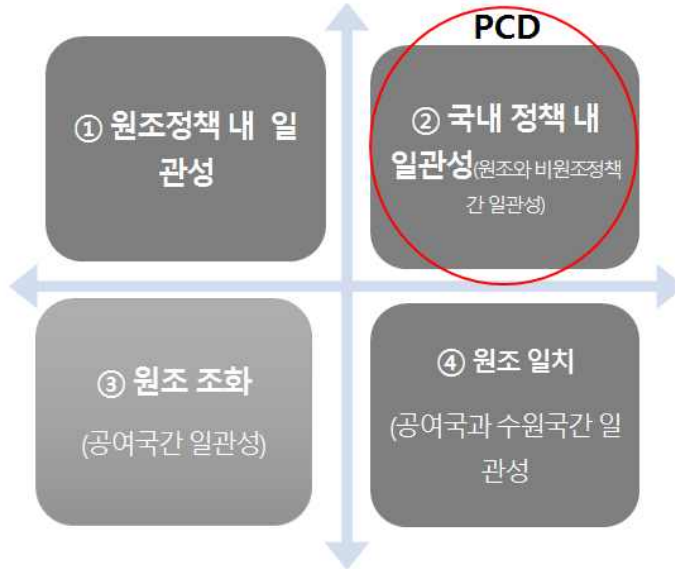
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이들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PCD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중견국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한국의 대외원조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광의의 국익에 기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PCD 논의의 발전 및 최근 SDGs이 채택이 PCD 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PCD 적용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이를 위해 PCD 논의를 이끌고 있는 OECD와 EU가 집중하고 있는 PCD 정책 중점 분야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정된 ODA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의 PCD 정책에 있어 어느 분야에 우선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국가 전략적 함의를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장은 PCD 개념, 발전과정과 주요 쟁점을 고찰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정책일관성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분야와 그 논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PCD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OECD, EU의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춘다. 4장에서는 분석 수준을 3장의 국제 수준과 달리 국가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DAC의 동료검토를 수검하고 있는 공여국이 어떤 분야에서 PCD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 공여국이 자국의 우수 PCD로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국제사회의 PCD 논의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있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PCD 개념과 쟁점

정책일관성 개념은 Robert Picciotto(2005)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그림 1 참조). 각 유형은 분석에 있어 영역과 대상이 서로 상이하나,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정책 수행과정에서 이들 네 유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개발의 효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본다.¹⁾

1) PCD 개념의 구분 및 발전과정은 순혁상·문정연, “국제규범의 내재화와 정치 환경: 스웨덴·독일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그림 1〉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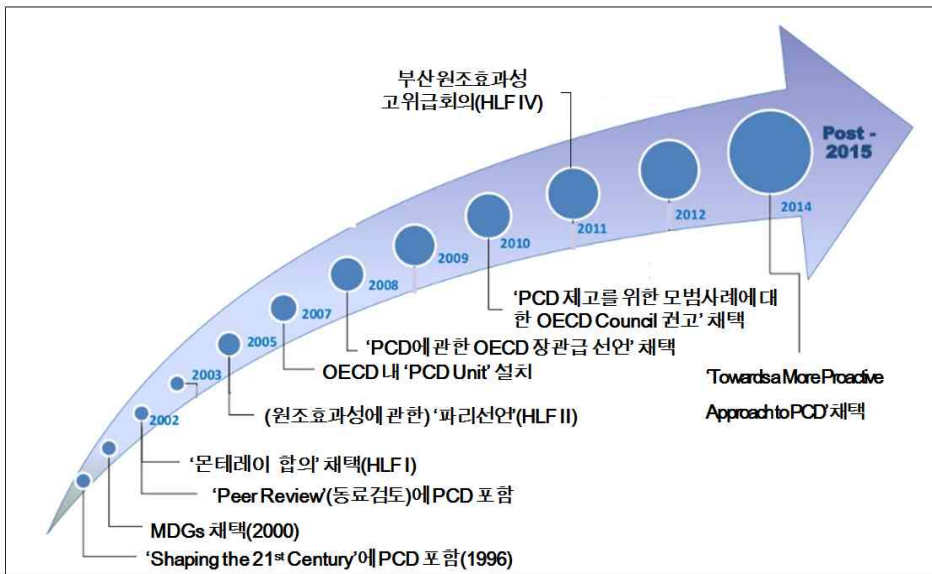
출처: OECD, *The Development Dimensi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Paris: OECD, 2005), p.30를 바탕으로 재구성.

OECD DAC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문건을 통하여 PCD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이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PCD는 두 번째 유형으로 DAC이 1996년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그림 2〉 참조). 이 문건은 선진국들의 모든 정책이 개발목표를 따르고,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원조 및 비원조 정책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OECD 2005, 38-43). 이후 DAC은 2001년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이 공유된 목표를 위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정책일관성으로 규정하고(OECD 2001, 27~28), 이를 바탕으로 PCD를 '원조 분야를 넘어선 공공정책 간 긍정적인 시너지와 스페illover(spillover) 효과를 통하여 개발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듬 해 OECD 각료이사회는 'OECD Action for a Shared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정책일관성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

1호, 2012)를 참조하기 바람.

는 한편, 2005년에는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를 통하여 정책일관성의 개념, 추진 방향, 분야별 비일관성 사례 등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제시 하였다.

〈그림 2〉 PCD 개념의 발달 과정



출처: OECD, PCD Unit 웹사이트(접속일: 2016.11.20.)

OECD는 2007년 PCD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개발에 관한 OECD 내부의 조정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조직은 OECD 전반에 걸쳐 개발에 대한 관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경험 공유 및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OECD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더 잘 대응하고, 회원국들에게 개발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나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와 다양한 행위자들이 빈곤감소를 위한 OECD의 전문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2008년 6월 공여국들은 ‘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통하여 PCD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평가 도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아울러 PCD가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달성에 필수적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같은 해, 그 동안 실시한 DAC 동료검토의 결과를 취합한 'Synthesis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를 발간하였고, 2009년 'Building Blocks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은 PCD의 확산을 위한 도전과제와 촉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Framework for an OECD Strategy on Development'이 채택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원,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개발 거버넌스, 개발을 위한 정책절차라는 네 가지 분야를 확인함과 동시에 PCD를 각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OECD 2005, 3~5). 같은 해 OECD는 'International Platform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를 개설하여 그 동안 축적된 PCD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MDGs 시대 PCD 개념은 동료검토의 'Development Beyond Aid'에 포함됨으로써 개별 공여국이 자국의 원조 및 비원조정책의 추진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어젠다로 자리매김 되었다. 하지만 원조와 비원조 정책 간 일관성 제고는 OECD의 관심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료검토의 보고서에서 공여국들이 자국의 PCD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²⁾ 이는 많은 공여국이 원조분야를 넘어서 비원조 분야의 정책을 개도국의 개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OECD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공여국의 비원조분야(기후변화, 조세, 투자, 송금, 불법자금흐름, 무역, 이민, 식량안보, 안보 등)에서의 PCD 추진이 공여국의 이익과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발굴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해 SDGs의 채택과 함께 발간된 OECD의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5: Policy Coherence and Green Growth'는 SDGs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PCD 개념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로 바꾸는 한편,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행위자(국제기구, 개별국가, 기업, 민간단체, 학계,

2) 동료검토에 소개된 공여국의 PCD 사례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

시민사회 등)의 참여로 특징되는 SDGs의 실현을 위해 PCSD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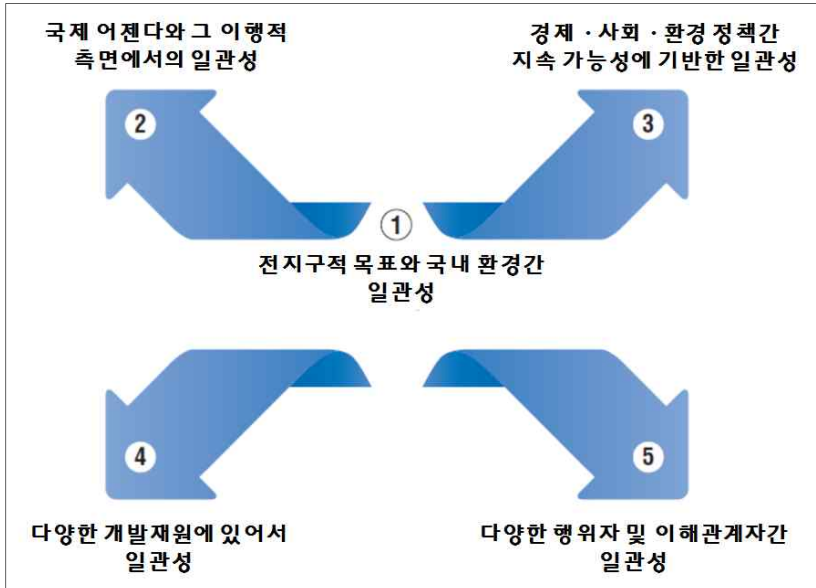
〈그림 3〉 PCSD의 SDGs에 대한 접근법



출처: OECD,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4: Policy Coherence and Illicit Financial Flows* (Paris: OECD, 2014), p.41.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OECD는 SDGs의 목표 실현을 위해 5가지 영역에서의 PCSD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전지구적 목표와 국내 환경 간 일관성, 둘째, Rio+20, SDGs의 기후변화 목표, G20 등 국제 어젠다와 그 이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셋째, 경제, 사회, 환경 정책간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의 일관성, 넷째, 공적 자금 및 기업, 국제 및 국내 자원 등 다양한 개발재원에 있어서 일관성, 끝으로 국가, 국제 및 지역기구, 시민사회단체(CSOs),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행위(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그것이다.

〈그림 4〉 SDGs 이행을 위한 PCSD의 5대축



출처: OECD,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4: Policy Coherence and Illicit Financial Flows* (Paris: OECD, 2014), p.49.

III. OECD, EU의 PCD 적용 중점 분야 변화 분석

이 장에서는 PCD 논의를 이끌고 있는 OECD와 유럽연합(EU)의 PCD관련 주요 문헌 검토를 통해 이들 두 주요 행위자가 집중하고 있는 PCD 정책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OECD는 2003년 ‘Policy Coherence: Vital for Global Development’를 통해 각 정책 분야별 PCD 논의를 활성화 시킨 반면 EU의 PCD 논의의 시작은 2005년에야 본격화 되었다. 이후, 이들 두 기구가 PCD 확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정책분야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았으나 결과적으로 최근 이들 두 기구가 중점을 맞추고 있는 PCD 추진 중점분야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1. OECD의 PCD 중점 분야 변화

2003년, OECD는 ‘Policy Coherence: Vital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PCD 추진 분야로 농업, 무역정책, 투자, 지식 및 기술이전, 이주, 글로벌 자원 분야를 제시하였다 (OECD 2003). 이후 발전된 논의를 바탕으로 2005년 OECD는 ‘OE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를 통해 기존에 제시된 분야의 용어를 보다 간결화(‘무역정책’을 ‘무역’, ‘지식 및 기술이전’을 ‘기술’)하는 한편, 농업과 글로벌 자원분야가 제외된 ‘무역, 이주, 투자, 기후변화, 기술’ 분야와, 새로이 ‘안보’ 분야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표 1>이 보여주듯이 OECD는 이들 분야에 대한 도전과제, 해결과제, 정책비일관성 사례, 필요한 실행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OECD 2005). 특히 무역, 투자, 환경, 재정분야에 초점을 두고, 개도국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일관적인 정책 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중지, 무역자유화, 반부패, 책임 있는 투자, 투명한 재정시스템 등과 같은 정책 비일관성을 찾아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1〉 OECD의 PCD 추진 중점 분야(2005)

	해결과제	정책 비일관성 사례
무역	무역장벽, 시장진입, 국내정책의 무역질서 왜곡	높은 관세, 까다로운 환경 및 위생기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장벽,特惠협정
이주	정치적 민감성, 본국과 이주국의 이해관계상충, 사회통합 문제	두뇌유출, 고급노동력 부족, 이주자 송금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 이주자사회 네트워크 부족, 본국 역이민에 대한 규제
투자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사회, 환경 기준의 느슨함 악용, 부패 및 뇌물 등 비리, 지역경제협력 협정의 불균등한 혜택
기후변화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지속불가능한 소비행동	개발 우선적 정책
안보	안보-개발 간 연결성에 대한 이해, 국제무기거래규약	-
기술	개발도상국 시장을 위한 기술 개발 R&D 부족	지적재산권 장벽, TRIPS, 종 다양성과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보상기준 부재

출처: OECD, *OE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Paris: OECD, 2005).

OECD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정책분야의 PCD 달성을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제고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DAC 동료검토(Peer Review)는 이들 분야에서의 정책 비일관성 사례가 개도국에 미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고 DAC 구성원들의 제도적 접근 및 성공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문서는 아직까지도 PCD를 논의함에 있어 분야별 해결과제를 제시한 핵심적인 보고서라고 평가 할 수 있다.

2011년, OECD는 다시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Recommendation for Policy Coherence'를 통해서 정책일관성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기존의 무역, 이주, 투자, 기후변화, 안보, 기술 분야로 구분하는 대신 상위 범주로 '경제성장', '경제거버넌스', '환경 및 자원안보', '사회'로 나누고(〈표 2〉 참조), 이 범주 안에서 거시경제정책에서부터 노동과 물 안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PCD 추진 분야에 포함시키면서 개도국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공여국 정부의 범이슈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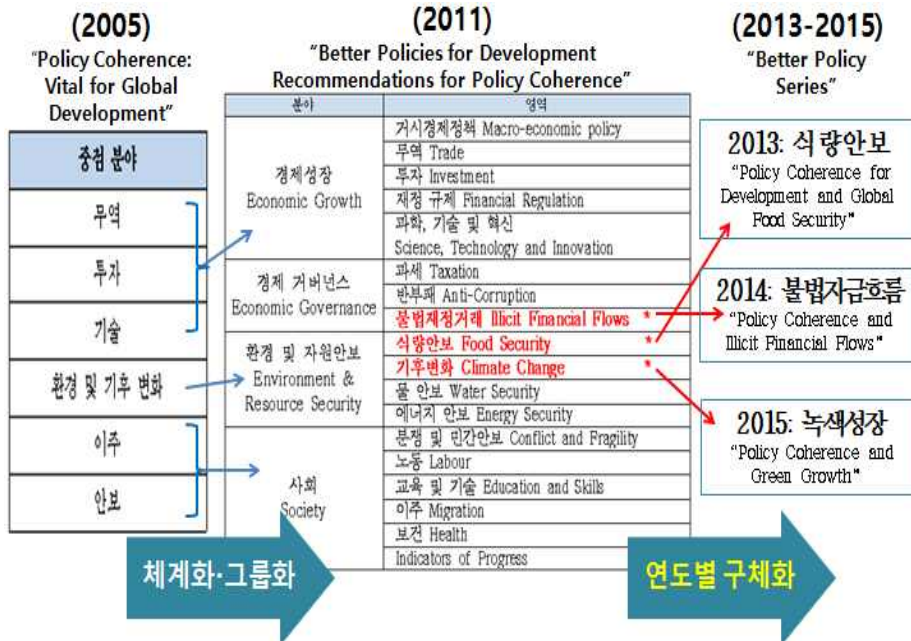
〈표 2〉 OECD의 정책일관성 제시 분야(2011)

분야	영역
경제성장	거시경제정책
	무역
	투자
	재정 규제
	과학, 기술 및 혁신
경제 거버넌스	과세
	반부패
	불법재정거래
환경 및 자원안보	기후변화
	식량안보
	물 안보
	에너지 안보
사회	분쟁 및 민간안보
	노동
	교육 및 기술
	이주
	보건

출처: OECD,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Recommendations for Policy Coherence* (Paris: OECD, 2011).

이후, OECD는 ‘Better Policy for Development’ 시리즈로 2013년 ‘Better Policy for Development :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Global Food Security 2013’를 통해 식량안보 분야의 PCD 추진의 중요성과 과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고, 2014년 ‘Better Policy for Development 2014: Policy Coherence and Illicit Financial Flows’등의 보고서를 통해 불법자금 흐름(금융) 분야의 도전과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2015년 발간된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5: Policy Coherence and Green Growth’는 국제사회의 SDGs 논의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개념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개념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책일관성 요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림 5〉 OECD의 PCD 적용 중점 분야 변화



출처: 저자작성

2. EU의 PCD 중점 분야 변화

EU는 2005년 정책일관성 추진 분야로 12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2007년 '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은 이를 재확인 하였다. 2007년 당시, EU가 PCD 중점으로 상정한 분야 중에서 무역, 안보, 이주, 기술, 환경과 기후변화는 OECD가 제시한 분야와 중복된다. 하지만 EU는 선정 분야를 더욱 세분화 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먼저 OECD가 선정한 기술 분야를 '연구 및 혁신(Research & Innovation)',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로 더욱 세분화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EU는 '농업(Agriculture)', '사회정책(Social Policies)', '어업(Fisheries)', '운송(Transport)', '에너지(Energy)' 부분과 같이 세부적인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EU라는 정치, 경제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지리적 통합을 가속화 시킨 가운데 이들 PCD 분야로 제시한 이슈가 EU 국가들의 국경을 초월한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 EU 정책일관성 추진 분야(2005~2007)

영역	영역
무역	사회정책
환경	이민
기후변화	연구 및 혁신
안보	정보 기술
농업	운송
어업	에너지

출처: EU Commission, '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Commission Working Paper, 2007).

여기서, 2007년, EU의 PCD 분야 세분화가 OECD에 앞서 논의되었다³⁾는 점과 이후 OECD의 2011년 PCD 문서에 이러한 세분화된 요소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3) OECD는 2011년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Recommendation for Policy Coherence'에서 세분화된 요소들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으나, EU는 이보다 앞선 2007년 '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에서 세분화된 주제를 제시하였음.

미루어 볼 때 EU의 세분화된 접근법이 OECD의 PCD 추진분야 세분화 및 재범주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12개에 달하는 세분화된 분야를 무역·금융,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주, 안보 분야 등 5대 분야로 묶는 한편 분야별 세분화된 도전과제를 재배치하였는데(〈표 4〉 참조), 이는 2010년의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Work Programme 2010~2013’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2010). 이는 OECD가 상위범주를 ‘경제성장, 경제거버넌스, 환경 및 자원안보, 사회’로 두고 세부 분야를 재배치 한 것과 대조되는 프레임을 취하고 있다

〈표 4〉 EU의 5대 PCD 정책 분야 (201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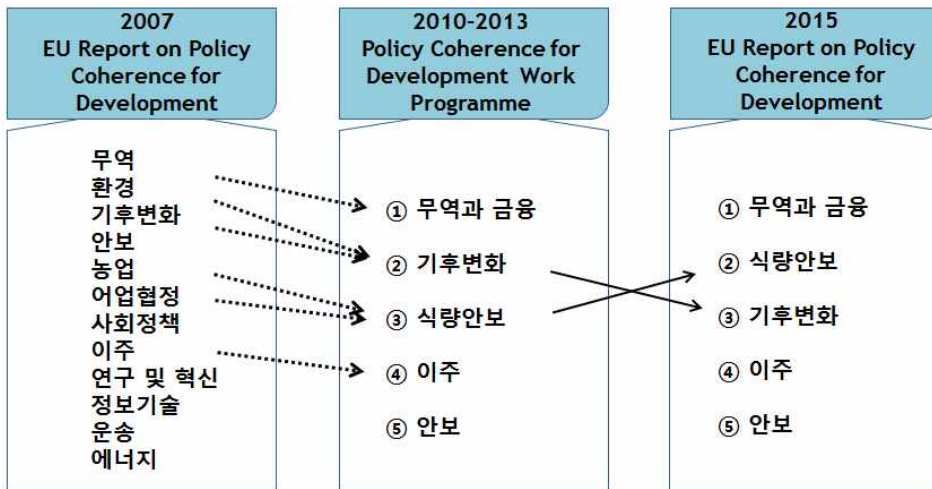
분야	세분화
무역·금융	무역협상/시장접근/ILO 노동규정/준엄한 일자리 및 환경기준/CSR/지적 재산권/세계거버넌스와 금융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접근/기후, 에너지 개발정책의 시너지효과 추구/개도국의 저탄소 및 기후보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개도국의 기후변화관련 조치들에 대한 지원
식량안보	농업, 무역, R&D와 혁신, 생물종다양성,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토지의 사용 및 접근성, 공동어장정책
이민	합법적 이민, 이동 및 순환 이민의 촉진/이민 및 개발의제의 확산/이민자 권리 및 젠더 균형 제고
안보	평화활동에 있어 개발계획의 포함/취약성과 분쟁에 대한 EU의 대응 제고/대인지뢰금지 및 소형화기의 확산 저지/안보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천연자원의 관리능력 향상/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안보적 관점에서 개발목적과 재정통의 시너지효과 제고

출처: European Commissi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Work Programme 2010~2013’을 저자가 재구성.

2005년, EU가 국제개발협력에서 PCD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래로 EU Commission은 격년으로 PCD 진행상황에 대한 정례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목차상의 분야는 현재 EU가 PCD 추진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2010년의 보고서는 EU가 2009년 지정한 무역·금융,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민, 안보 분야를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2015년의 정례 검토 보고서상의 목차에

서는 무역·금융 분야 다음으로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정책보고서에서 목차는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근 EU의 PCD 추진분야는 2009년에 채택된 5대 구분 범주를 기본으로 하면서 식량안보 분야를 기후변화 분야보다 정책적 우선하고 있다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European Commission 2015).

〈그림 6〉 EU의 PCD 추진분야 변화



출처: 저자작성

IV. DAC 회원국의 PCD 적용 분야와 주요 사례

OECD의 DAC는 PCD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동료검토(Peer Review)⁴⁾의 'Development Beyond Aid' 섹션에서 검토 대상 국가의 PCD 상황을 평가하고

4) OECD DAC의 회원 자격을 획득한 국가들은 4~5년 주기로 동료검토(Peer Review) 수검 대상이 된다. 동료검토는 DAC 사무국의 검토위원과 함께 비수검 국가들 중에서 4개 국가의 대표단이 함께 수검 대상국가의 원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한 이후 2012년 첫 수검을 받았으며, 2017년 두 번째 수검 중에 있다.

있다. 하지만 국별 동료검토 시 PCD 분야는 해당 당사국이 자신 있는 분야나 진전을 이룬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동료검토 수검국가의 전반적인 PCD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PCD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동료검토 보고서를 분석함(〈표 5〉 참조)으로써 각국이 집중하고 있는 PCD 중점 적용 분야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요 공여국의 PCD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PCD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내재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동료검토 22국가들의 PCD 평가 분야를 분석한 결과, 무역 분야는 DAC 회원국이 모두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CD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 이슈는 빈곤퇴치와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제로써 동 분야에서 개도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원조공여국의 무역 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⁵⁾ 이 때문에 공여국들이 무역 분야에서 자국이 실시하고 있는 PCD 우수 사례를 제시하기 용이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안보 분야의 PCD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10개국과 9개국을 많았는데, 기후변화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선진국에 있어 가장 민감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로 선진국의 정책적 관심과 PCD적 요구가 서로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보 분야는 9.11 테러 이후 안보위협이 근저에 빈곤과 저발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과 국경 밖에서의 안보 불안이 결과적으로 국내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공여국으로 하여금 동 분야에서 PCD적 접근법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부패와 책무성 분야가 6개국을 차지하였는데,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잘못된 거버넌스가 개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 점에서 선진 공여국의 ODA 사업은 주로 거버넌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동 분야에서의 PCD 사례를

5) 일례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제도는 가장 전형적인 무역분야의 PCD 사례로 공여국이 전통적으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이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위해 그 적용 국가와 규모를 확대해 왔는데,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논리가 적용된 국제 무역규범의 확산 사례이기도 하나, 대표적인 무역 분야 PCD 사례이기도 하다.

형성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이민 분야 4개국, 투자 분야가 3개국, 농업 분야 2개국 그리고 수산 분야가 1개국 순 이었다.

〈표 5〉 DAC 동료검토 상의 PCD 검토 분야(2006~2015)

분야(국가수)	국가
무역(22)	모든 국가
기후변화(10)	덴마크(2011), 독일(2010), 일본(2010, 2014), 스웨덴(2009), 스위스(2009), 영국(2009), 오스트리아(2009), 호주(2013), 아일랜드(2009), 프랑스(2013)
안보(9)	덴마크(2011), 미국(2011), 포르투갈(2010), 프랑스(2008), 캐나다(2007, 2012), 핀란드(2007, 2012), 네덜란드(2006), 영국(2009), 벨기에(2010, 2015)
부패 및 책무성(6)	미국(2011), 아일랜드(2009), 노르웨이(2008), 호주(2008), 스페인(2007), 캐나다(2012)
이민(4)	덴마크(2011), 그리스(2006), 네덜란드(2006), 호주(2013)
투자(3)	룩셈부르크(2008), 캐나다(2012), 프랑스(2013)
농업(2)	벨기에(2010, 2015), 이탈리아(2009)
수산업(1)	뉴질랜드(2010)

출처: OE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Paris: OECD, 2005); 손혁상 외, '한국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방안' (서울: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센터, 2012); OECD DAC 웹사이트의 국별 Peer Review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료검토에 소개된 OECD DAC 회원국들의 PCD 대표 사례로 호주의 불법자금흐름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의 분쟁해결 지원과 개발지원간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법을 취한 안보분야를 들 수 있다(〈표 6〉 참조).⁶⁾

먼저, 호주는 불법자금흐름 방지를 위해 연방경찰과 법무부간의 활발한 협업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무부 역시 다양한 파트너 국가와 재정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등의 범정부적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6) 개별 공여국의 PCD 우수 사례는 여러 분야가 있겠으나, 최근 PCD 중점분야 중에 기후변화와 불법자금 그리고 안보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분야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OECD 2008a).⁷⁾ 특히 호주 정부의 원조기구인 AUSAID를 통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반부패 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Tackling Corruption for Growth and Development’의 채택은 동료검토에서 호주의 대표적 정책일관성 사례로 소개되었다(AUSAID 2007).

〈표 6〉 PCD 분야별 사례와 주요 내용

국가	분야 (사업연도)	PCD 내용
호주	불법자금흐름 (2008)	‘Tracking Corruption for Growth and Development’ 정책을 통해 불법자금 흐름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접근 실시
	기후변화 (2013)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Clean Energy Act’ 및 탄소세 규정을 위한 ‘Clean Energy Future Package’ 시행
캐나다	안보 (2010)	분쟁해결 지원과 개발지원간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안보와 개발 분야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확인
프랑스	안보 (2013)	EU의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CSDP) 프로그램을 말리에 도입하여 안보와 개발간 정책일관성 제고

출처: 저자 작성

뿐만 아니라, 호주는 높은 석탄 소비량과 에너지 집약적 광산업 등으로 인해 전 OECD 국가 중 ‘1인당 탄소배출량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11년 ‘Clean Energy Act’와 ‘Clean Energy Future Package’를 채택하였는데, 이 조치들의 핵심은 탄소 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 고정된 가격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OECD 2013).⁸⁾

7) 정책일관성 논의에서 불법자금흐름의 문제는 불법자금흐름이 개도국의 금융 시스템을 약화, 경제발전 잠재력의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도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불법행위에 기반한 자금흐름이 심각하게는 테러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불법자금 흐름은 마약, 위조지폐, 가짜 의약품 유통 및 거래, 공공형령 등의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 기후변화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일관성의 필요성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야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 물부족, 질병 증가, 생물종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시스

캐나다는 분쟁해결 지원과 개발지원간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안보와 개발 분야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 일례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캐나다의 군사협력은 가장 큰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무역통상, 국제협력, 국방부 및 외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로부터 고차원적인 협동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꼽힌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정부 부처들은 아프가니스탄 군사협력을 위한 모든 이슈들을 논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추밀원 사무처 내에 아프가니스탄 기동부대를 설치하여 외무부, 캐나다 국제개발처(CIDA), 국방부로부터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안보와 개발의 분절화가 법 집행력 강화를 방해하여 테러위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원국인 말리의 안보와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한 PCD적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즉, 프랑스는 말리의 안보를 EU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EU의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CSDP)' 프로그램을 말리에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는 말리의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인간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말리 시민사회와도 협력함으로써 말리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EC 2013).

템의 약화가 최근 급속도로 가시화 되고 있는 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최빈국(LDC) 국가나, 작은 섬 국가(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기타 취약국(재난 대응력이 취약한)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수면의 상승과 토양침식 및 지력 약화, 풍수해와 가뭄 발생 빈도의 증가, 사막화 이슈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 9) 5세 이하의 사망률 비율이 높은 20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분쟁상태에 있으며, 분쟁으로 인한 국가 경제는 분쟁 전 수준의 평균 15% 감소를 보이며, 1990부터 2005년까지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분쟁으로 인한 손실은 3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분쟁이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극심하며, 이 때문에 분쟁의 해결 및 적절한 관리 없이 개발 목표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PCD 논의에서 안보 분야가 지속적인 정책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EU 2009).

V.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이 2010년 원조 선진국 모임인 OECD DAC의 회원국이 된 이래로 2017년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PCD 논의를 주창하고 있는 OECD와 EU 그리고 개별 공여국이 PCD 논의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이 PCD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우선 분야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7〉 OECD, EU, 동료검토 상의 PCD 중점 분야

	OECD	EU	동료검토
분야	식량안보, 불법자금흐름, 기후변화, 무역 이민	무역·금융, 식량안보, 기후변화, 이민, 안보	무역, 기후변화, 안보, 부패 및 책무성, 이민
공통분야	무역, 식량안보, 기후변화, 불법자금흐름(조세, 투자, 송금 등 포함), 이민, 안보		

출처: 저자 작성

이를 위해 본 논문은 OECD와 EU의 PCD관련 정책 문서 및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개별 공여국의 PCD 적용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동료검토(Peer Review)보고서를 전수 조사 하였다. 그 결과 OECD는 무역, 이민, 안보, 투자, 식량, 농업과 같은 포괄적인 분야에서 시작하여 최근 2013년 이래로 식량안보, 불법자금흐름, 기후변화 등 세 분야를 구체화하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OECD 회원국과 상당부분 겹치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역시 OECD와 다른 정책 분야에 PCD를 집중하기 보다는 무역, 금융, 식량안보, 기후변화, 이민과 안보 분야에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OECD와 유사한 정책 우선분야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개별 공여국의 PCD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PCD 접근법의 적용이 용이한 무역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안보, 부패 및 책무성과 같이 최근 국제정치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에 PCD 접근법의 적용이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OECD, EU 정책 문서 및 보고서 상에서 PCD 정책 분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분석과 동료검토(Peer Review) 상의 PCD 추진 사례를 종합하면, 향후 PCD 논의는 무역, 기후변화, 불법자금흐름(조세·투자·송금 포함), 식량안보, 이민 및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아울러 PCD의 중요성이 17개에 이르는 범분야 목표를 포함한 SDGs 채택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원조 및 비원조 정책을 넘나드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여러 정책 분야에서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 되어야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향후 PCD 논의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패러다임으로써 지속적으로 개별 공여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 의제로써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DAC의 회원국으로 두 번째 동료검토를 받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PCD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PCD 사례로 해석되는 국내정책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못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PCD 논의의 중요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그럼으로 PCD 정책으로 포함될 수 기존의 국내사례를 발굴하고 축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PCD 논의에 동참하는 노력과 함께, 앞서 OECD와 EU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PCD적 접근법을 접목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7.06.26.

심사완료일: 2017.08.06.

게재일: 2017.08.30.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형규. 2015. “국제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고용허가제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성훈. 2010.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EU의 역할과 의미: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28(1).
- 박수영·오수현. 2015.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논의분석』.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 손혁상·박영선·문경연. 2012. 『한국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방안』. 서울: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센터.
- 손혁상·김소위·서진희·이윤미. 201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과 대 개도국 무역정책: OECD DAC와 주요 선진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4(3).
- 손혁상·문경연. 2012. “국제규범의 내재화와 정치 환경: 스웨덴·독일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0(1).
- 손혁상·박영선. 2012. “한국의 원조와 비원조 정책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52(3).
- 조영희·신지원 외. 2013. 『이민정책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영문 자료]

- EC. 2007. *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Commission Working Paper: COM(2007) 545 Final*.
- EC. 2007. *FP7 in Brief: How to get involved in the EU 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Luxembourg: EC.
- EC. 2009. *Renewable Energy Directive*. Luxembourg: EC.
- EC. 2013. *EU 2013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Brussels: EC.
- EC. 2015a.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15 EU Report*. Brussels: EC.
- EC. 2015b.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EU Report 2015*. Brussels: EC.

- EU. 2007. "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Commission Working Paper*. EU.
- Keijzer, Niels. 2010. "EU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From Moving the Goalposts to Result-based Management?." *Discussion Paper*.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 OECD.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 OECD. 2003. "Policy Coherence: Vital for Global Development." *The OECD Policy Briefs*. Paris: OECD.
- OECD. 2005a. *OE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Paris: OECD.
- OECD. 2005b. *The Development Dimensi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Paris: OECD.
- OECD. 2007.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Canada*. Paris: OECD.
- OECD. 2008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Australia*. Paris: OECD.
- OECD. 2008b. *Synthesis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DAC Meeting, 18 April 2008.
- OECD. 2009. *Building Blocks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aris: OECD.
- OECD. 2010. *Belgiu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Paris: OECD.
- OECD. 2011a.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Recommendations for Policy Coherence*. Paris: OECD.
- OECD. 2011b. "Framework for an OECD Strategy on Development."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Paris, 25-26 May 2011. Paris: OECD.
- OECD. 2012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Canada*. Paris: OECD.
- OECD. 2012b.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Korea*. Paris: OECD.
- OECD. 2013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Australia*. Paris: OECD.

- OECD. 2013b.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in Focus 2013: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Global Food Security*. Paris: OECD.
- OECD. 2014.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4: Policy Coherence and Illicit Financial Flows*. Paris: OECD.
- OECD. 2015a. *Belgiu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Paris: OECD.
- OECD. 2015b.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5: Policy coherence and Green Growth*. Paris: OECD.
- OECD. 2016a. *The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matic Module on Food Security 2016*. Paris: OECD.
- OECD. 2016b. *The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matic Module on Illicit Financial Flows 2016*. Paris: OECD.
- Picciotto, Robert. 2005. "The Evaluation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Evalu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